

경기도, 구제역 추가 발생 없으면 25일 사실상 종식

이동제한, 전지역→발생농장 반경 3km로 축소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보름 넘게 확산되지 않으면서 경기북부에서도 구제역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25일께 사실상 구제역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31일 전국적인 구제역 흐름백신 일제접종 후 항체가 형성된 구제역에 대한 면역력이 가장 강해지는 2주일 후를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방어선으로 잡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달 28일과 29일 경기 안성시 축산농가 2곳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경기지역의 구제역 사태는 발생 2주일이 넘은 이날까지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

지 않으면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초기에 취해졌던 이동제한 조치도 점차 축소돼 이날부터는 안성시 전지역에서 발생농장 반경 3km로 축소됐다.

경기북부지역 역시 별다른 이동 제한 조치 없이 한우와 육우가 출하되면서 평소와 같이 인정을 찾은 모습이다.

도는 남은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항체 일제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25일에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안성시와 비슷한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지역 역시 초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도내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사실상 구제역이

종식된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축산 관계자들이 의견이다.

이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적인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양성을 일제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항체 형성률과 백신 효과를 분석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시 구제역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에 대한 항체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25일 도내 모든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방역조치가 종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로 구제역이 종식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28개 농가 2272두에 그쳐 방역 비용과 출하 지원 손실을 제외한 민간 재산피해는 80억~90억원 정도로 집계될 전망이다.

뉴스스

노량진 고시원촌에 ‘역세권 청년주택’

박원순, 사업지 첫 지정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에 20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한의 청년층이 밀집돼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사업 대상지를 지정한 첫 사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을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 3층~지상 18층(연면적 2만 1196.02㎡)에 총 299세대(공공임대 39세대·민간임대 260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 1층에는 임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된다. 지상 1~2층에는 주민공동시설(근린 생활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 총 148면 가운데 10% 이



상을 나누거나 주차장으로 만든다. 건물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시는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6월 착공해 2021년 1월 입주자 모집 공고 실시, 같은해 7월 준공해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비

수도권 봄 분양대전

3~5월 3만9668가구 일반분양

봄 분양 성수기 올해 수도권에서만 일반분양 3만9668가구가 쏟아진다.

1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3~5월 수도권 임대를 제외한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628가구 대비 18.6%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2만8832가구(60.1%)다. 이어 인천이 9432가구(28.8%), 서울이 6622가구(19.7%) 등이다. 월별로는 5월이 1만4742가구로 가장 많고, 3월 1만3278가구, 4월 1만1866가구 순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연초의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봄을 기점으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곳들이 증가하면 분위기는 쉽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이 규제지역이라 대출 등 분양대금 미련이 어려워 진 민족관련해서 충분히 계획하고 분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 결과 인천 예술인들이 열악

‘조회연표’ 교육교류사업 제안에 北 “적극 검토” 화답

北 교육성·교직동에 교육교류사업 제안서 전달

조회연표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에서 제안한 교육교류사업에 대해 북한 측이 긍정적인 답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14일 밝혔다.

서울시 교육부는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교육성은 북한의 내각중앙 교육행정기관이며 교직동은 북한의 교원단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북한 교육성, 조선교육문화학업동맹(교직동) 관계자에게 교육교류사업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북측은 해당 부서와 적극 협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동학술대회 ▲서울-평양 학생 교육여행 ▲서울-평양 학생 예술 활동 교류 ▲서울-평양 학생 스포츠 교류 ▲서울-평양 학생이 함께 하는 ‘과학어울림’ ▲서울-평양 직업교육 교류 등 10대 교육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향후 남북 교육교류 민관단체 및 북한교류단 국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평양 10대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통일교육과 연계한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30회 맞은 맘앤베이비엑스포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30회 맘앤베이비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인천 예술인 53.5% 월소득 150만원 이하

인천연구원, 예술인 복지플랜 실태 조사·복지정책 제안

인천연구원은 14일 지난해 기획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예술환경, 예술노동,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 및 민족도 평균소득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조사 결과 인천 예술인들이 열악한 생활여건과 불공정한 창작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예

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30.3%,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예술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84.7%에 이르러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6%가 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이 보통(26.3%) 혹은 자주 발생(23.3%)한다고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 성폭력이 보통(25.1%) 혹은 자주 발생(34.7%)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높았다.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